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
2. 건명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안건요지 : 불임참조
4. 검토의견 : 불임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안문환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08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정함(안 제2조).
- 나.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와 관리범위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안 제3조).
- 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기일을 종전 20일에서 30일로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5조).
- 라.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마.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을 개별건축물, 타공사, 타행위로 세분화하여 기준을 마련함(안 제18조 내지 제20조).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공공하수관거로부터 300m 이내로 하였으며,
- 안 제4조는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규정을,
- 안 제5조와 제7조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기간과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회수를,
- 안 제9조 내지 제10조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강화 및 유지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 안 제12조와 제14조는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하수배출량의 산정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15조는 계측기의 점검사항에 관한 규정을,
- 안 제17조는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토록 하였으며,
- 안 제18조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 시기, 기한에 관한 사항을,
- 안 제21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을 정하였고,

- 안 제22조는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의 규정을
- 안 제23조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 체납된 금액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시행(개정 2006. 9. 27, 시행 2007. 9.28)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입법 취지에 맞도록 「하수도사용조례」안 전부를 개정하는 한편,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행 조례보다 사용개시 신고기간연장(20일→30일), 점용기간의 명확화(연→일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의 조정($1\text{m}^3/\text{일}$ 이상→ $10\text{m}^3/\text{일}$ 이상), 가산금의 하향 조정($5/100$ → $2/100$)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바람직한 사항이나,
- 현행조례 제28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볼 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와
- 안 제14조 제4항 내용중 설치된 계측장치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자연고장 시에도 하수배출량을 최근 6개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받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아닌지,

- 그리고, 안 제11조, 제17조, 제18조 내지 제20조, 제21조인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환경부 시달 표준조례안 제26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미반영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